

# 2020. 11. 11. [수] 언론보도

MBN

2020년 11월 10일 (화)  
사회

## 경기도 평화부지사 "도라전망대에 집무실 설치...유엔사 간섭 말라"



기자회견하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유엔사 관할 비무장지대(DMZ) 내 도라전망대 앞 잔디광장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는 안을 놓고 군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오늘(10일) 오전 통일대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라전망대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에 개성공단 재개선언 추진 등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비군사적인 경기도의 고유행정에 대한 유엔사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날 남과 북 양측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평화부지사의 현장 집무실을 개성공단과 북한이 보이는 도라전망대에 설치하려 했습니다.

이에 어제(9일) 집무실 설치를 위한 집기를 반입하려다 군 당국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 부지사는 "관할 군부대는 개별이탈 금지, 코로나19 방역 철저 등 7가지 수칙을 지키면 출입을 허가하겠다는 조건부 동의에도 유엔사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기 설치를 거부했다"며 "단순 집기를 우리 땅에 유엔사의 허락 없이 설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며 이는 유엔사의 부당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임진각에 평화부지사 임시 집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향후 유엔사 승인이 나는 대로 집무실을 도라전망대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군 당국은 경기도의 이날 기자회견은 억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은 도라전망대가 이미 개방된 공간으로 경기도의 집무실 설치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현재 유엔사에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사안"이라며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9일 경기도가 막무가내로 집기를 싣고 와 무조건 들어가겠다고 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며 "이 같은 행동은 경기도가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경기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DMZ는 유엔사 땅? 부지사 집무실도 허락받는 나라

경기도, 도라전망대 앞 추진  
"개성공단 재개 촉구" 취지  
육군부대, 조건부 동의했지만  
통계권 쟁 유엔사 승인 받아야  
이재강 부지사 "주권침해" 성토  
파주시 "DMZ전학 규정 개정을"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0일 오전 경기 파주 통일  
대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권을 가진 유엔  
군사령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까지 자의  
적으로 통제한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접경  
지역 지방정부도 유엔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0일 오전 파  
주 통일대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  
라전망대 집무실 설치에 개성공단 재개선언  
추진 등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비군사  
적인 경기도의 고유 행정에 대한 유엔사의 부  
당한 간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육군 1사단에  
"개성공단 운영 재개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이 바라다보이는 도라전망대 앞에  
볼골식 텐트를 세워 평화부지사와 공무원,  
지원인력 등 6명이 상주하겠다"는 내용의 협  
조공문을 보내고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  
를 추진했다. 관할 군부대는 개별이탈 금지,

코로나19 방역 철저 등 7가지 수칙을 지키면  
출입을 허가하겠다고 '조건부 동의'했지만,  
9일 유엔사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기 설치가 거부됐다.

경기도는 "주권침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  
발했다. 이 부지사는 "복으로 보내는 물건도  
아니고, 군사 목적도 아닌 단순 집기를 우리  
땅에 유엔사의 허락 없이 설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이는 유엔사의 부당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관할권 행사는 적대행위를 규제하고 중단하  
기 위한 것인데, 이와 무관한 활동까지 규제  
하는 것은 일관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일  
단 입진각 평화누리 안에 평화부지사 집무실  
을 운영하고, 향후 유엔사 승인이 나는 대로  
집무실을 도라전망대로 옮길 방침이다.

현재 안보관광 외 목적으로 비무장지대

에 있는 도라전망대, 제3땅굴 등을 출입하려  
면 '유엔사 비무장지대 안보전학 규정'에 따  
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 때  
문에 파주시도 비무장지대 안에서 운영하  
는 시설물 이용,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할 때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무장지대  
안보관광지에서 공연·전시 등 문화행사도  
제한을 받는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달 21일 국방부에 유엔  
사 비무장지대 안보전학 규정을 개정해달라  
고 건의했다. 파주시 한 관계자는 "민간인에게  
도 개방된 대한민국 땅과 건물에 대한민국 공  
무원이 출입하는데 일일이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화가난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사는 △남북철도 경의선 북쪽  
구간 현지조사 동행 △통일부 차관 등 한독  
동일자문위 고정 지파(GF) 방문 △통일부 장  
관 대성동 마을 방문(기자단 출입 불허) 등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 출입을 불허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방부는 지난달 "유엔사  
가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출입에 관해서만 관  
단을 내려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  
지만, 제도 개선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유엔사 관계자는 "도라전망대 앞 평화부  
지사 집무실 설치"는 1사단을 통해 승인 요  
청이 들어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  
했다.

박경민 기자 [maria@hani.co.kr](mailto:maria@hani.co.kr)